

## 비교경제체제론의 최근 동향<sup>(1)</sup>

김 병 연

비교경제체제론의 최근 동향 발표를 맡은 서울대 김병연입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는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 ‘자기는 더 이상 연구를 포기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는 소련을 연구하다가 지금은 전공은 환경경제학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즉, 사회주의권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의 전통적인 비교체제론의 관심 분야 대상인데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교체제론이 경제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체제론이 사회주의 경제만을 계속 연구한다면 그동안 경제체제론이라는 분야가 경제학에 기여하게 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비교체제론은 주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류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의 문제, 주인-대리인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분야중 하나가 바로 비교체제론, 즉 사회주의 경제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J. Kornai가 주장하고 있는 연성예산제약 같은 것도 지금은 주류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도경제학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이유 중 하나도 사회주의 동유럽권의 붕괴 이후에 체제이행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교체제론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연구하여 경제사의 한 부분으로 바뀌어버린

---

(1) 이 기초연설 중 상당 부분은 Kim, Byung-Yeon, “The Studies of Economic Systems of Comparative Economics: Beyond Economics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7, March, 2012, 11-21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기 학술지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면 과연 그 동안의 비교체제론이 수행해 왔던 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체제론을 지역경제론으로 치환시켜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경제 혹은 동유럽경제가 비교체제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하는 대상을 국가로 볼 때는 적합한 발언이지만 과연 어떤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체제론을 모두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 특색이 무엇인가, 즉 “비교체제론을 말할 때 비교라는 개념과 체제라는 개념과 지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현대 경제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반면 어떤 지역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질성, 특이성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관심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들에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체제 이행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론의 일종의 변형된 모델로서 그 분야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체제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A로부터 B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체제 이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던 사유화, 자유화, 안정화, 그리고 제도개혁을 포괄해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체제론 이후에 이행기 경제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이행 기간이 2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EU에 가입했고, 그 국가들을 이행기 국가라고 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절실히 던진 질문이 ‘왜 체제론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과연 현실 경제를 다루면서도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예전에 체제론이 했던 그런 연구 대상이 무엇일까?” 하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체제론 분야의 가장 중요한 두 학술지의 웹사이트에 있는 학술지가 다루는 연구 주제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용했습니다.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 비교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는 체제의 비교, 즉 사회주의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에 비교 체제론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이행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며 그것은 자본주의 내에서 다양한 제도들과 그 성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

적인 문제와 경제와의 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문화 혹은 사회 규범과 경제의 관계까지도 포괄하는 대상이 되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Economics of Transition* 학술지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학술지의 대상을, ‘구조 변혁, 제도 발전과 성장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제도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우리 학술지는 어떻게 제도와 그 변화가 분석, 측정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새로운 사고를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Economics of Transition*도 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분류에 따르면 18개의 경제학 분야가 있는데 세부 분야 중 하나가 경제체제(economic system)이고, 이것의 하부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단어가 체제와 제도(systems and institution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제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체제와 제도를 다루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회주의는 이제 역사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체제와 제도를 분석한다면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의 체제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 관련성이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즉, 사회주의 경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라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권과 시장 조정 메커니즘이 동시에 있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이 국유나 공유였고, 조정 메커니즘이 중앙 계획인데 이는 실패했고, 시장사회주의, 즉 소유권 혹은 재산권은 국유, 공유지만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은 시장을 모방한 체제였던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사유권과 시장이라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즉 재산권과 함께 시장 조정 메커니즘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떤 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체제의 현상과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펼쳐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비교체제론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소유권과 조정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도 가장 강조했던 중요한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활동을 조정하여 사회 복리로 이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 저작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조정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시장

(market)”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시장(market)이라고 말하기 전에,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사람이라는 사회규범, 양심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제도로서 법적 공정성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회 규범, 공식적인 제도와 아울러서 시장제도가 확립되어야 조정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한다면 시장 조정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시장 조정 메커니즘을 본다고 하면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의 복합적 결과로서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시장과 이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지금 흔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 논의와 이어집니다. 즉, 그 동안에는 시장이라면, 모든 것을 시장 아니면 중앙계획으로 생각했지만, 시장이라는 것도 다양한 제도나 또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과 정부의 역할도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의 어떤 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북유럽을 보면 국가의 경제 개입 정도가 높지만 경제 성과로 볼 때 반드시 미국에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예를 보면 정부의 경제 개입을 통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경우에 시장이 우월하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시장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편협한 관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인가, 즉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저개발국 경제에서 어떻게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빈 공간을 어떤 형태로, 어떤 주체가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본다면 한국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점점 발을 빼면서 시장이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자본주의를 볼 때 이 체제의 조정(system coordina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제도적인 상호 보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이것이 다양한 자본주의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그 분담 관계뿐만 아니라, 금융, 노동, 교육, 기업 간 다양한 체제의 하부 체제(sub-system) 사이에서의 제도적인 비교우위가 어떻게 극대화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부 체제가 상

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그 체제의 비교우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체제라는 것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과 시장 조정을 사이에 둔 다양한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정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고용관계, 기업관계, 금융제도가 다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과 제공 주체, 더 나아가서는 교육시스템, 경쟁력 보유산업, 시민사회 가치관까지 다 얽혀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체제는 경쟁력 보유산업을 볼 때 급진적 혁신이 가능한 바이오나 IT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면에서 어떤 산업이 필요하냐하면,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가 짧은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산업에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보다는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한 직업에 집중하는 교육보다는 일반 교육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능공을 양성해서 오랫동안 특정 산업에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로 쉽게 옮겨가고 적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이 미국의 혁신과 앞서 말씀드린 시장 기능에 기초한 노동시장, 고용관계, 기업관계 등등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상호 정합적인, 복합적인 체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일본식 경제의 경우는 노동시장, 고용관계, 기업관계, 금융제도에서도 연결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 및 해고의 자유도가 낮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시장과 비시장의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미국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복지수준과 제공주체, 정부의 크기나 교육 시스템 등도 미국형 자본주의와 다르며, 경쟁력 보유산업도 점진적 혁신이 강조되는, 즉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장 내 교육(on the job training)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용해서 계속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의 교육이 훌륭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가치관도 미국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높은 신뢰수준,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와 높은 신뢰수준 이런 것들이 그 체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성과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거친 주장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해하기 힘든 비전형적 체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정합적인 것들이 섞여있는 형태라는 말입니다. 즉, 노동시장, 고용관계 이런 것들도 시장과 연결 고리

〈표 1〉 경제체제의 분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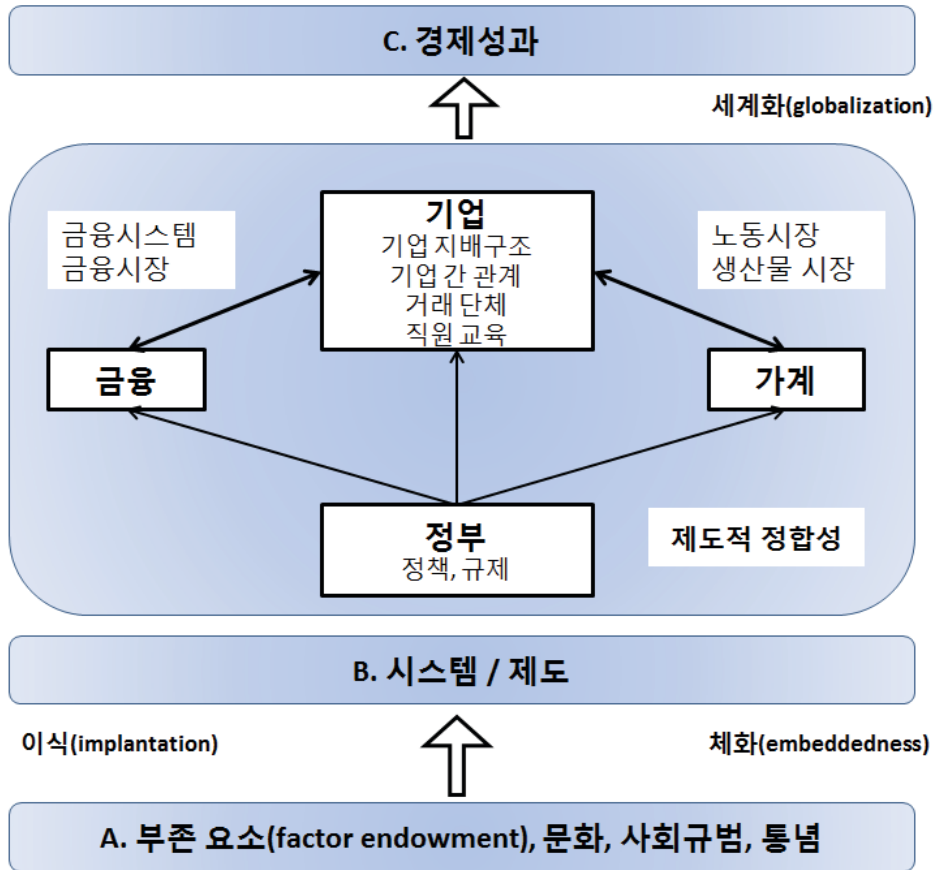
		미국식 자본주의	일본식 자본주의	유럽대륙형 자본주의	북유럽형 자본주의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의 종류 및 시장조정 메커니즘의 작동 정도	노동 시장	고용, 해고의 자유가 높음	고용, 해고의 자유가 낮음	고용, 해고의 자유가 중간 수준	고용, 해고의 자유가 높음	고용 자유 높으나 해고 자유 낮음
	고용 관계와 형태, 기간	<b>계약 중심</b>	(인사이더) 장기고용 (아웃사이더) 단기고용	중간 수준의 고용 기간	중간수준의 고용 기간	(인사이더) 장기고용 (아웃) 단기고용
	기업 간 관계	시장에 따른 계약	장기발전적 연결망 관계	시장과 (수평적) 연결망 혼재	시장과 (수평적) 연결망 혼재	시장과 비대칭적 연결망 관계
	금융제도 및 시장	자본시장, 직접 금융 발달	은행을 통한 장기금융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직접금융과 간접 금융 혼재
시장 대 비시장 조정 메커니즘	거의 시장	시장과 정부-기업-각종 인맥관계	시장과 정부-시민-기업 관계	시장과 정부-시민-기업 관계	시장과 정부-기업-각종 인맥관계	
복지수준과 제공 주체	낮은 수준, 정부와 시민단체 제공	장기고용을 통한 복지 정부제공 복지는 높지 않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 시민사회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음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	
정부 크기	작음 (미국<영국)	작은 편임	큰 편임	매우 큼	작음	
경제 규모	큰 편	큰 편	다양함	작음	중간 정도	
교육	일반교육	일반교육 <b>OJT</b> 중요	직업교육	직업교육	일반교육	
경쟁력 보유 산업	급진적 혁신 - 바이오, IT, 금융	점진적 혁신 산업 - 자동차	점진적 혁신 산업 - 자동차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함	(중간) 급진 혁신과 점진 혁신 양자에 걸쳐 있음	
시민사회	발달, 정책 제언과 공공부조 (자선)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달	다양한 시민사회, 노조 발달	다양한 시민사회, 노조 발달	발달 수준이 낮음	
가치관 및 문화	개인주의와 높은 신뢰 수준	집단주의와 비교적 높은 신뢰	비교적 개인주의. 비교적 높은 신뢰 수준	개인주의 그러나 사회적 연대감과 신뢰 높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 낮은 신뢰수준	

자료: 김병연(2013).

가 함께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혹은 비시장의 조정 메커니즘도 시장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힘이 크고, 또 인맥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연결망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크기, 교육, 경쟁력 보유 산업 등도 서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제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체제를 지향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누가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각 하부 체제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체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체제와의 상호정합성을 보기에 가장 우수한 장점을 가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러한 분야를 체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D. North 이후에 가장 빨리 발전되고 있는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유럽 경제의 체제 이행 과정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봤더니 실제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았더니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과 법 질서, 계약 이행과 같은 제도가 있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아세모글루(Acemoglu) 등의 실증분석이 추가되면서 제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제도의 형성과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존 자원(factor endowment)이라든지 혹은 피식민지역에 대한 제도의 이식(implementation)이라든지, 문화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와 거래비용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제도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림 1).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라는 것은 경제성과를 제일 위에 둔다면, 이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업이라든지, 금융, 가계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체제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가계나 기업, 정부, 금융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상호 정합성이 떨어



자료: Kim, Byung-Yeon(2012).

〈그림 1〉 경제체제와 경제 제도에 관한 연구구제

지는 상황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의 상호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체들 혹은 제도를 결정하는 근저에는 문화와 사회 규범, 공유된 믿음(shared belief), 부존요소 등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근저 요인이 제도에 영향을 주고, 제도가 다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수와 수행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동일한 민족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사회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근저요인이 사회 규범, 가치관이고 그 다음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제도가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와 가치관의 상호 작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 주제 즉 사회주의 경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체제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체제론이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각 세부적인 부문, 각각의 나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의 실패가 결합되면서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제론 전공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각 체제간의 상호 정합성을 보면서 그 체제의 비교우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제학 연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6370  
팩스: (02) 886-4231  
E-mail: kimby@snu.ac.kr

## 참고문헌

- 김병연(2013):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不整合性)과 가치관의 혼란”, 『한국형 시장경제의 모색』, 서울대 경제연구소.
- Kim, Byung-Yeon(2012): “The Studies of Economic Systems of Comparative Economics: Beyond Economics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7, 11-21.

